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중국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군사적 초강대국으로 급속 부상하고 있는 한편 동북 3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나진, 청진 등을 통한 동해 출구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의 대중 의존도도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정체성 유지, 경제이익의 증대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중국이 공세적으로 동진정책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극동 개발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에너지 수출과 철도연결을 통해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극동지역을 아·태경제권에 순조롭게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지역 전략 구도 변화에 대비하려면 한국 정부 역시 중국이나 일본처럼 보다 전향적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와 한반도 물류기지화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스관건설 사업이나 철도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나진항 개발을 비롯한 북한 변경지역 개발 사업에도 다자 협력 등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진출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한·미동맹을 대외정책의 주축으로 삼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용적인 협력도 증진하여 이들 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강대국 부상
현황 및 대외정책
 - 가. 중국 경제의 부상과
경제외교
 - 나. 중국의 군사적 부상:
군사비 증가와 군
현대화
3. 러시아의 극동정책
 - 가. 중국의 동해 진출
전략과 러시아 극동의
물류기지화 정책
 - 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
극동 에너지정책
 - 다. 극동에서의 군사 ·
안보 · 외교정책
4.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1. 서론

- 1970년대 말부터 초고속성장을 이루어온 중국 경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외환보유고는 최근 2년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한 3조 2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군사력도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어 중국의 초강대국화가 시간문제라 여겨지고 있음.
-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이자 반테러전쟁으로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와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실업 증가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한 이 시대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패권은 최고점을 넘어 쇠퇴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0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 2천 300억 달러로 GDP의 8%에 달해 유럽 내 재정불량국인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임.
- 2000년 푸틴대통령 집권 이후 고속성장으로 소련 붕괴 이후 추락한 경제 복원에 성공해온 러시아도 세계 금융위기와 유가하락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경제를 회복하고 있음. 러시아는 1996년부터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권을 견제하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음. 그러나 중국의 국력 상승세가 매우 빠르고 수천 km의 국경을 맞댄 접경국이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편승 · 활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초강대국화에 사전 대비하는 중 · 장기 전략을 취하여왔음. 특히 중국이 동북 3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창지투 계획을 추진하면서 나진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러시아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이고 낙후지역인 극동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아 · 태경제권에 편입시켜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제 진흥을 이루는 동시에 중국의 초강대국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아 · 태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위상과 영향력을 회복 · 강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음. 2011년 8월 24일 울란우데에서 열린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북 · 러 양국이 서로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고 경협을 진흥시키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현황과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분석해 본 뒤,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함.

2. 중국의 강대국 부상 현황 및 대외정책¹⁾

-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4위의 영토 대국, 고대문명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이 덩샤오핑이 제창한 실용주의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기록하면서 초강대국으로 질주하고 있음.
- 이처럼 중국의 부상은 경제 부문에서 단연 두드러지지만 이는 군사력 증강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주변국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음.

가. 중국 경제의 부상과 경제외교

- 중국 경제는 개혁기(1979-2008)에 연평균 9.9%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음. 일본의 최전성기 30년 평균성장률이 8%였고, 1960-1995년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린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각기 7.8%, 8.3%, 8.4%, 8.9%였다는 기록과 비교할 때,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으로 평가됨(서진영, 1).
- 그 결과 중국은 GDP 기준으로 2008년 말 미·일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2010년 2/4분기에 일본을 추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 1990년 중국의 GDP가 미국의 6.7%에 불과했는데, 2008년에는 30.9%가 됨(조영남, 43-44). 골드만삭스는 2003년 장기전망에서 중국의 경제규모가 2041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09년에는 그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김(이남주, 5).
- 국가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수입/GDP와 중앙재정수입/재정수입 두 지표가 1993년에는 12.3%와 22.0%로 매우 낮아 국가분열이 우려되었으나, 2009년 각각 20.4%와 52.4%로 증가하여 중국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줌(이남주, 5).
-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단연 세계 1위임. 2011년 상반기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2천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 중 거의 절반인 1조 1천 541억 달러는 미 국채를 사들였음(미국채의 8.2%에 해당. 조선일보,

중국의 부상은 경제 부문에서 단연 두드러지만, 군사력 증강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주변국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음

**적극적인 군사무기
현대화로 중국은
2015년경 미국의
'세계적 경쟁자'는
아니지만, '지역적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2011.4.20).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제3세계 지역에 해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위안화 무역 결제 규모도 2010년 1분기 184억 위안이던 것이 2011년 1분기 3천 603억 위안으로 1년 만에 19.6배 폭증함. HSBC 은행은 향후 3-5년 사이 연간 13조 위안으로 늘어나 달러와 유로에 이은 세계 3대 무역결제 통화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조선일보, 2011.4.25).

- 중국은 '세계의 시장'과 '세계의 투자자'에 더해 '세계의 규칙제정자'로도 등장하고 있음. 세계 금융위기 이후 IMF 의결권 재분배, 새로운 기축통화 도입, 금융자본 통제 강화, 개도국 지원 등 국제 금융질서 개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조영남, 46-47).

나. 중국의 군사적 부상: 군사비 증가와 군 현대화

1) 군사비의 증가

- 중국의 군사비는 1990년대 이후 급증하였음.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국방예산은 1996-2008년 기간에 매년 12.9%씩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조영남, 47).
- 실제 국방비는 국방예산보다 1.5-2배 이상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2008년의 경우 국방예산은 600억 달러였지만 국방비는 1,050-1,500억 달러에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함(조영남, 48).
- 2010년 11월 2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0 세계 방산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 1천 62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천 999억 달러로 85.1%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같은 기간 미국의 국방예산은 5천 338억 달러에서 5천 500억 달러로 3.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됨.

2) 무기현대화와 군사 작전 능력의 향상

- 적극적인 군사무기 현대화로 중국은 2015년경 미국의 '세계적 경쟁자'는 아니지만 '지역적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인근 해역에서 해상거부 능력 보유, 다양한 장거리 타격력을 통한 미국의 역내 작전능력 위협, 미국의 정보 우위에 대한 도전 등임(조영남, 49).

- 2010년 7월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는 미 항모에 맞서는 중국의 3대 병기를 소개하였음. 항모킬러 미사일로 사거리 1,500km의 동평-21C와 함께 잉지-62, 최신함에 탑재한 선변미사일이 있고, 사거리 8천km를 넘는 쥐랑-2 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아시아 최대 잠수함 함대가 있으며, 중국 해안 곳곳에 중·단거리 미사일부대가 배치되어 영해로 들어온 적함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임(연합뉴스, 2010.7.23). 2010년 12월 26일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중국의 중거리 지대함 탄도미사일 동평-21D의 프로그램이 초기작전 운용능력(IOC)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최대사거리 3,200km에 마하10으로 비행해 미사일방어망으로 격추하기 힘든 이 미사일이 수년 내에 배치되면 미 항모전단이 중국과 가까운 공해에 안전하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국은 2011년 1월 게이츠 미 국방장관 방중기간에 스텔스 전투기 쟈(殲)-20 시험비행을 성공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미 항모의 서해 진입 대비를 과시하듯 ‘항모킬러’로 불리는 창젠 10호 수중발사 순항미사일의 발사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서해를 관할하는 북해함대 소속 핵 탑재 전략잠수함 창청 200호를 공개하였음. 또한 예상보다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옛 소련의 퇴역 항공모함인 바랴그호(항공기 52대 탑재)가 개조되어 2011년 8월 10일 진수되었고 4만 8천-6만 4천t급의 일반 동력 중형 국산 항공모함 2척이 2015년까지 건조될 것이며, 2015-2020년 9만 3천t급 핵 동력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하는 등 항모 4척 이상을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군비증강 목표는 아직 방어적·보수적임. 군사교리가 국내 체제유지와 통제, 대외적으로는 원유수송로 확보 등 해양이익 수호, 대만 통일, 영토분쟁 해소 등에 맞추어져 있음. 실제 중국은 공격적인 해외 군사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고, 해외영토에 전투부대를 파견하거나 군사기지를 운영한 적이 없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경제력 상승에 따른 실제 필요에 부응하고 국제지위 확보를 위한 ‘합리적’ 행동으로 볼 수 있음(조영남, 49).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반면에 중국은 동북아 지역과 극동에 핵심적인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어...

러시아는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대해
'기회'와 '도전'의
양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급부상에 편승하려 함

3. 러시아의 극동정책

- 러시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는 유럽지역에 위치한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임.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중심지에서 가장 먼 지역에 속하므로 중대 관심지역인 독립국가연합(CIS)이나 유럽보다는 관심의 비중이 낮음 편임. 반면 중국 역시 대국이지만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지인 베이징이나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와 국토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이나 극동에 대해 핵심적인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음.
- 러시아 중앙정부의 동시베리아·극동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경제의 주력 산업이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 및 수출인데, 유럽에 인접한 지역의 에너지와 자원은 개발이 거의 다 진척되었으므로 더 풍부한 에너지와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동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자원 개발이 필요해짐.
 - 러시아 에너지 및 자원의 수출이 주로 유럽에 치중되어 유럽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으므로 가격이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을 다원화하여야 하므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이 필요해짐. 특히 이 지역에 부존된 풍부한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탐사·개발한 뒤 수출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제를 살리려면 중국, 일본, 한국 등의 협력이 필요해짐. 즉 이 지역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동북아 및 아·태경제권에 편입시켜 발전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임.
 - 극동지역은 러시아 내에서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서 사회·경제상황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고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이 지역을 균형 발전시킬 필요성이 커짐. 즉, 국내 정치적 요인과 국토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이 지역 개발에 종전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임.
 - 이 지역을 개발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수출하고 물류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수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강대국 위상을 유지하려함.

-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대해서는 기회와 도전 양 측면에서 이에 대응하고 있음.
 - 먼저 중국의 급부상이 주는 기회적인 측면으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양국의 경제가 상호보완성이 크므로 이에 편승하려함. 접경지역인 중국이 생산하는 소비재를 수입하고 빠른 속도로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으므로 교역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산업개발 투자를 유치할 뿐 아니라 에너지나 자원 또는 무기 등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증진하려함.²⁾
 - 중국의 급부상이 주는 도전적인 측면도 있음. 먼저 러시아와 중국은 문화 및 전통이 이질적이고 연해주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갖고 있음. 더구나 중국 동북 3성은 급성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반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상대적 후진성과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1860년 이전 청나라 영토였던 이 지역이 무혈점령 당할 수 있음을 우려함. 또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경제가 동북 3성에 예속되고 중국이 나진항을 사실상 조차하여 동해가 중국의 내해화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전략적 우려도 가질 수 있음. 외교에서도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제고되는 것과 달리 러시아가 주요 관련 당사국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함.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일본이나 한국, 아세안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모하여 극동지역을 동아시아의 에너지 및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등을 구축하여 중국의 급부상을 통제·관리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음.
-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은 러시아정부가 2007년 8월에 비준하고 2008년에 수정한 ‘2013년까지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극동·자바이칼 개발계획’)에 잘 나타나 있음. 그 주요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모두 5,660억 루블(약 210억 달러)을 투입, 시베리아 바이칼 호 동쪽에서부터 베링 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산업 인프라 구축, 투자 환경 개선, 자원과 낙후된 산업의 종합 개발, 외자 유치나 합작기업 설립 및 자유경제지대 창설 등 여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러시아의 아·태지역 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한다는 것임(성원용, 2009, 429-435). 특히 연해주·하바로프스크·사할린 등 한반도 인접 극동지역 3주에 총 투자액의 50%가 투

한편 러시아는 일본, 한국, 아세안 등과의 협력을 통해 극동지역을 동아시아의 에너지 및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등을 추진하여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려고 함

중국을 북한을 통해 동해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이 동해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중대한 문제를 야기함

입될 예정이고, 2012년 9월 8-9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에만 58억 달러가 배정되었음.³⁾

- 메드베데프 정부는 2009년 말 보다 장기적인 ‘극동발전전략 2025’를 승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교통·운송, 에너지, 통신 및 기타 사회 인프라의 구축 및 현대화임(이재영, 서울신문, 2010.12.27).

가. 중국의 동해 진출 전략과 러시아 극동의 물류기지화 정책

- 중국 정부는 동북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랴오닝성 연해 경제벨트와 지린성의 창지투(창춘-지린-투먼)선도구 개발을 추진하여 동북지구(동북 3성과 내몽고 동부)에 경제벨트를 연계 구축하고 있음. 특히 2009년 8월 30일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계획 강요-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사업을 비준하여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지린성의 주요 지역을 연계하여 산업을 진흥하며 두만강 유역을 통해 동해와 태평양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훈춘을 물류거점 및 대외 개방의 창구(세관도시)로 만들고 옌지, 룽징(龍井), 투먼을 물류 허브 및 산업 서비스 기지로 건설하며 창춘과 지린 두 도시를 중심 배후도시로 발전시켜 2020년에는 경제 규모를 4 배로 성장시킨다는 것임(위샤오, 70-73).
-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11월 20일 중국 상무부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나선지역과 위화도·황금평 특구계획에 합의하였으며,⁴⁾ 12월 23일 중국 지린국제경제기술합작회사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간에 ‘북·중 나진항 개발 협약’이 체결됐다고 알려짐. 그 내용은 이미 중국의 창리그룹이 나진항 1호 부두 1번 선석 10년 사용권을 확보한 가운데, 중국 측이 중국 취안허(圈河)에서 나진항간 고속도로 및 철도와 취안허대교를 설계·건설하고 4·5·6호 부두를 신규건설하며, 북한은 이의 50년 사용권 및 자유무역구를 제공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사업에 참여하다는 것 등이라고 알려짐(남문희, 2011.3.12 & 4.2).
- 중국은 2010년 취안허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를 보수한데 이어 2011년 4월 원정리-나진항 도로 보수공사에 착수했음. 북·중은 6월 9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을 거행하였고, 중국은 애초 공사

를 2011년 연말에 완공하기로 했다가 공기를 앞당겨 오는 10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임. 중국은 이미 2011년 들어서서 2차례에 걸쳐 취안허 통상구-나진항 루트를 통해 3만7천t의 석탄을 남방으로 시험 운송했음. 중국은 원정리-나진 도로보수가 마무리되면 연간 100만t의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상하이 등 중국 남방으로 운송할 계획이고 이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보일 것임.

- 중국은 함경북도 청진과 함경남도 단천을 통한 동해로의 진출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투먼(圖們)시 정부가 북한의 함영투자위원회와 2010년 말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 황금평·나선 경제특구 착공식이 이뤄진 2011년 6월께 합의를 이뤄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함. 중국이 자재와 비용을 부담하여 북한이 6월에 공병대를 투입해 훈춘~나선 간 도로에서 뺀어 나와 청진으로 향하는 약 15k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며, 청진항 보수·확장 공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이미 2010년 7월 청진항 3, 4호 부두를 15년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북한으로부터 확보했으며, 이번 투자로 넓고 소규모인 청진항을 무역항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할 계획임. 또 2015년까지 청진~룽징(龍井)시싼허(三合)통상구 고속도로(47km)와 허룽(和龍)-북한 남평-청진 고속도로(39km)도 신설될 예정임. 양국은 이후 단천항 개발과 관련한 공동투자 협의도 진행해 최근 협약을 체결했으며 곧 도로와 항만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연합뉴스, 2011.7.24).
- 중국이 나진항과 청진항을 통해 동해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함.
 - 나진항은 부동항이어서 러시아가 소련시절부터 해군 기지로 활용하려던 곳이었고 러시아로 들어와서는 러시아의 물류중심지화 사업에 중요 거점으로 상정해왔던 곳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한 중 단철도가 연결될 때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에 항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진항을 정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나진까지 확장하여 부산이나 일본, 동남아에서 선박으로 나진까지 컨테이너를 실어오면 이를 하역해 철도로 유럽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를 동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의 중요한 거점이었음. 그런데 중국이 적극적인 물량공세를 앞세워 개발하고 항구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섰기 때문에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임. 러시아는 3호 부두의 50년 사용권을 확보하고 2008년 10

중국이 북한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면 궁극적으로 동해가 중국의 내해처럼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 환경에 구조적으로 위협이 될 것임

**러시아가 추진한
철도연결계획은
경제적, 비경제적
난점으로 인해
잘 되지 않고 있고,
나진항 개건사업도
아직까지 별로
진척되지 못한 상태임**

월 나진과 하산간 철도 및 나진항의 개건 착공식까지 가졌지만 러시아 측의 투자 자금난으로 인해 지연되어 왔고 최근에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였음.

- 나진항이나 청진항을 통해 광물이나 생산품을 상하이 등 중국 동남부로 실어 나르다보면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군함이 이를 호위한다는 명분이 생기고 결국 동해가 중국의 내해처럼 변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 환경을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임.
- 물론 2009년 6월 중·러 양국 수뇌부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 및 중국 동북지역 진흥 전략을 유기적으로 공동 진행하는 데 합의하여 쌍방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 창춘에서 출발, 훈춘을 거쳐 나선을 다녀오는 자동차 관광코스가 신설되고 북한 최북단인 온성 1일 관광이 20년 만에 재개되는 등 2011년 들어 중국의 대북 관광도 활기를 띠고 있을 뿐 아니라 2011년 4월 훈춘과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및 나선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이 개시되었고, 훈춘은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 항을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항로도 2011년 6월 개통하였음. 러시아 극동과도 맞닿아 있는 훈춘의 2011년 상반기 대러시아 교역량도 크게 늘었음. 대러시아 교역 거점인 훈춘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량과 출입국 인원이 각각 3만2천30t과 1만48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6.8%씩 증가하였음(연합뉴스, 2011.7.15). 또한 2011년 1월 헤이룽장성의 대 러시아 무역액이 5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함. 헤이룽장성의 무역액은 이 기간 중국의 대 러시아 전체 무역액의 10.2%를 차지했음.
- 러시아의 철도연결 계획은 러시아 철도 기술자가 2003년 북한 동해안 선로를 실사하고 북한 선로를 복원하여 시베리아철도(TSR)와 연결하는 데 25억 달러가 든다는 비용 산출까지 마쳤으나 다음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음. 먼저 북한의 핵 개발 강행으로 남·북·러 3각 협상이 크게 진척되기 어려웠고, 러시아가 한국에게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러시아와 한국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였음. 철도 연결 노선에서도 북한은 동해선을 거쳐 하산으로 연결되는 동부선을 원했지만 이는 한국에게는 산업지역에서 격리되어 운용비용이 비싸고 180km의 동해남부선 철도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었음. 한국이 원한 서울-평양-신의주-만주-몽골-러시아로의 서부 노선은 증가하는 한·중 화물 수송을 담당하는 이점과 기존 철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러시아가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서울-문산-원산-하산-우수리스크로의 중북부노선은 북한이 군사상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북한 철도망의 북동쪽 1,000km의 인프라와 기술적 조건이 열악하여 개선비용으로 50-7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⁵⁾

-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건사업도 크게 진척되지 못했음.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을 개건하고 나진-하산 철도를 개보수 및 현대화하며 화물수송용 화차를 확보하여 부산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항구로부터 해상 수송을 통해 오는 화물을 나진에서 받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보내는 컨테이너 물류수송사업을 벌이는 것임. 이 사업은 2001년 8월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뒤, 상호 방문을 통해 철도 개건·현대화, 두만강-하산 구간에 광섬유 통신선을 건설 및 공동운영이 합의되어 2008년 10월 4일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의 개건 착공식이 나선시 두만강역 지구의 북·러 친선각 앞에서 열렸음.⁶⁾ 나진항의 개건사업은 3단계로 기획되어 노후화된 기존 설비의 제거와 컨테이너 크레인을 비롯한 새 설비의 반입, 부두시설의 건설, 도크의 확장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제1단계는 2010년 10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음.⁷⁾ 그러나 이후 큰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함. 중국의 동진정책과 러시아의 남진정책이 나진에서 만났는데,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 악화로 주춤하는 사이 국력이 팽배하고 의욕이 넘치는 중국이 기선을 제압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임.
- 한국도 관심을 기울였음. 한국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4:6의 투자로 합작기업을 만들고, 이 합작기업과 북한이 8:2 또는 7:3의 지분을 갖는 합영기업을 설립하자고 합의하였음. 그러나 한·러 간 합작기업 설립이 지연되면서 북·러 간에 설립된 합영기업의 러시아 측 지분에 한국이 참여하는 모양이 되었음.⁸⁾
- 중국의 동해 진출로 러시아나 한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철도 연결 사업에 나설 필요가 발생하였으므로 귀추가 주목됨. 특히 최근 러시아가 나진항 3호 부두위에 30만t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남문희, 2011.3.12), 나진항과 하산역 간의 52km 구간을 러시아처럼 광궤로 연결하여 2011년 5월 중순 현재 12.8km의

**중국의 동해진출로
러시아나 한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철도연결 사업에 나설
필요가 발생함. 2010년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극동지역
에너지 물류 개발에
대한 참여를 가속화함**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개보수가 마무리되었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컨테이너 터미널도 건설할 계획임(연합뉴스, 2011.8.22).

- 러시아 정부는 그 외에도 제2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밤(BAM Baikal-Amurskaya Magistral) 철도 및 그 지선들, 사할린과 극동 본토 연결 철도를 기획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2007년 러시아 동북부 지역과 북미대륙을 연결하는 베링해철도(사하-추코트카-베링해-알래스카) 건설을 제안하면서 극동본토-사할린-홋카이도-일본 본토 연결 철도 건설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음(한종만, 151).
- 한국에서는 포스코가 극동지역 에너지·물류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음. 2010년 11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메드베데프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스코는 러시아 유연탄 업체로 야쿠트와 엘가지역에 주요 광산을 보유한 메첼사(러시아에서 유연탄 공급 1위, 철강업 5위)와 극동·시베리아지역 자원개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메첼사가 보유한 석탄과 철광석 매장량은 33억t, 2억t에 달하는데, 포스코는 엘가지역 석탄광산(매장량 22억t) 개발에 공동 참여하여 철강원료를 확보하게 됨. 특히 더 주목되는 부분은 메첼사가 갖고 있는 포시에트 항의 현대화와 바니노 항 신규건설에 참여하는 것임. 석탄수송터미널과 철도 등을 건립하는 항구 현대화 사업을 벌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극동지역에 일관제철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기반으로 동북 3성, 몽골 등지의 자원 개발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 함(한국경제, 2010.11.11 & 파이낸셜뉴스, 2010.11.10).

나.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 에너지정책

- 러시아는 석유 생산 및 수출에서 세계 1-3위를 다투고(매장량 7위), 천연가스부문에서는 단연 1위이며, 석유 및 가스 채굴분야에서도 세계 1위, 철광석 매장량 세계 1위, 석탄매장량 세계 2위임.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관세수입을 포함할 때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수출 비중도 67%나 차지하며 2010년 에너지 수출량은 33.1% 증가한 2,677억 달러에 달했음(소콜로프).
- 러시아는 중·장기적으로 유가 변동으로부터 경제 안정을 보장하고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러시아 지도부도 경제의 현

대화와 균형적인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낙후된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개발하면서 산업을 진흥하며 유럽에 치중된 판로를 아시아 쪽으로 다변화하여 에너지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수출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음.

-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 에너지 정책은 크게 석유개발과 송유관사업, 가스개발과 가스관사업, 전력사업 등 세 가지 나누어 볼 수 있음.

1)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astern Siberia-Pacific Ocean oil pipeline, ESPO)

- 러시아가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유관 건설 사업임. 트란스네프트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타이셰트에서 러시아 극동 나홋카 인근 코즈미노항(블라디보스톡 동쪽 100km)까지 총연장 4천663km의 ESPO 송유관 가운데 타이셰트~아무르주 스코보로디노 간 1단계(2천700km) 공사를 마치고 2009년 12월 28일 가동에 들어갔음.
- 2010년 9월 27일 베이징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스코보로디노에서 헤이룽장성 다칭을 잇는 약 1,000km의 송유관 건설 완공식을 거행함. 12월 19일 처음으로 시베리아 석유가 다칭에 시험적으로 도착하고 2011년 1월 1일 원유가 공급되기 시작함. 2009년 양국 간 맺은 협정대로 중국은 250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20년간 하루 30만 배럴, 연 1,500만t의 원유(중국 연간 수요의 4%)를 공급할 예정임.)
- 타이셰트에서 보낸 원유 일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코즈미노 수출터미널로 운송되어 유조선을 통해 아·태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음. 한국은 이미 1999년부터 사할린산 원유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GS칼텍스가 ESPO 75만 배럴을 수입하였고 2010년에 나홋카에 도착한 1억 배럴의 원유 중 39%를 한국이 수입함(매일경제, 2011.2.28).
- 러시아는 사업 2단계로 2014년까지 코즈미노 항구까지 송유관을 완성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원유공급량을 하루 120만 배럴로 증대시킬 계획임. 특히 당초 공급목표는 하루 160만 배럴이었음(이하 이성규 참조).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 에너지 정책은
석유개발과 송유관
사업, 가스개발과
가스관 사업, 그리고
전략 사업으로 3분하여
추진되고 있어...*

**러시아 외교부가
북핵문제의 해결에
돌파구를 찾고자
북한으로 가스관을
부설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간 수송인프라 미비로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었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유전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국영업체인 로스네프트사의 반코르유전(2014년에 하루 46만 배럴)과 유루브체노-토홈스코예유전(2016년에 하루 20만 배럴), 수르구트네프트·가스사의 탈라간 유전(2010년에 하루 7.2만 배럴), TNK-BP사의 베르호넨촌스코예유전(2014년에 하루 20만 배럴). 러시아정부는 열악한 개발 여건을 가진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
- 로스네프트사는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하루 40만 배럴의 정유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모색 중임. 2015년경 동부지역에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면 30만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30-40만은 코즈미노 수출터미널을 통해 아시아지역으로 각각 수출되고 나머지 40만은 지역 내 정유공장으로 공급될 것임. 트랜스네프트는 2020년까지 원유선적터미널의 규모를 연간 8천만t 규모로 늘려 아·태지역 원유 수출 비중을 현재 3.8%에서 30%로 대폭 확대할 방침임.
- ESPO 원유의 품질이 중동산 원유에 비해 손색이 없으므로 품질과 지리적인 이점을 앞세워 아·태시장으로 원유수출이 늘어나면 러시아의 경제적·외교적 영향력도 증대될 것임.

2) 가스 개발·통합 및 수출

- 동부 가스프로그램 : 아·태지역 중국 및 기타 국가 시장에 대한 가스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가스 채굴·수송 및 공급을 위한 단일시스템을 동시베리아와 극동에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시작함(마리아 부르두크스카야).
 - 국가 동부 단일 가스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가스프롬이 주관.
 - 러시아 동부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야쿠츠크, 캄차카, сахалин 등이 가스채굴 중심지로 선정됨.
 -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수송 시스템 구축 및 발전과 이 가스수송 시스템을 사하(야쿠티야)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의 가스파이프라인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OC)와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가스프롬이 2010년 9월 시베리아에서 중국 서부 국경을

있는 ‘알타이 가스관’을 건설, 2015년부터 연간 300억m³의 시베리아 산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중·러 간 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연합뉴스, 2010.12.8).

- 러시아는 2009년 2월 18일 사할린-2 가스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영국의 앤드루 왕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첫 상업적 가스 생산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준공식을 가졌는데, 사할린 LNG 생산시설 가동은 천연가스 매장량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러시아가 유럽 수출에 이어 아·태 시장, 넓게는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됨. 러시아는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약 60%를 일본으로, 나머지는 한국과 미국에 20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맺고 수출할 예정인데,¹⁰⁾ 지금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했던 러시아로서는 선박을 통한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판로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됨.¹¹⁾
-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9월 러시아 방문 시, 이르면 2015년부터 사할린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방식(PNG: Pipeline Natural Gas)으로 연간 750만t 이상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양 정상은 참석한 가운데 양국 국영가스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¹²⁾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가스프롬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 연 100만t의 폴리에틸렌과 50만t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화학 공장과 500만t 규모의 LNG 액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함.
- 러시아 외교부는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동북아 지역 안정화에 필수적인 북핵문제 해결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으로 가스관을 부설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크렘린이 이를 받아들여 가스프롬에게 준비를 지시하여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북한에 공급하거나 가스를 사용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모스콥스키예 노보스티 2011년 7월 22일자 보도, 세계일보, 2011.7.23에서 재인용).
- 2011년 8월 24일 김정일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올란우데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극동지역 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북한 통과

**극동지역의 전력수요가
제한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인접한 중국이나
북한은 물론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제될 수밖에 없음**

**최근 들어 러시아는
남쿠릴 열도에 대한
실호적 지배를
재확인하고 극동
지역에서 군사력도
강화함**

가스관 건설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남·북·러 전문가 특별위원회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업은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음. 더구나 사할린 가스전으로부터 하바로프스크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가스관이 2011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므로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상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 사업은 3자 모두에게 호혜성이 탁월하여 러시아는 30년간 안정된 천연가스 시장을 확보하여 9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북한은 통과료로 매년 1억 달러를 벌며 한국은 가스 수입비용을 매년 5,000억 원 이상 절약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려면 가스공급가 및 북한지역 가스관 설비 자금 부담 주체가 3자간에 합의되어야 하고, 특히 한국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남·북 간 신뢰 구축이 긴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진척이 필요함.

3) 극동지역 전력계통 연계와 수출

- 극동지역 전력산업은 Inter RAO 통합전력시스템(Unified Electric System, UES)의 극동지사인 보스토크에네르그가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
- 극동지역의 전력수요가 제한적이므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인접한 중국이나 북한은 물론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제될 수밖에 없음.
- 러시아는 이미 중국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고, 남·북한 및 일본에 전력 수출을 희망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성원용 교수의 글(2010.12)을 참조함.
- 한 사례를 들면 러시아 극동과 중국 헤이룽장성을 잇는 송전선 설치 공사가 완공되어 2011년부터 연간 43억kW의 러시아 전력이 중국에 공급될 예정임(흑룡강일보, 2010.12.8 보도, 동일자 연합뉴스 재인용).

다. 극동에서의 군사·안보·외교정책

- 군사력 증강과 조직 개편(국방연구원, 109-116)
 - 푸틴대통령은 2007년 4월 “러시아는 이미 ‘2007-2015 국가무기장비 계획’의 실행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하였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향후 1,67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5년을 기점으로 21세기형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 2010년 9월 20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향후 10년간 약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 군 장비 현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고 미국 등 서방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힘. 블라디미르 포포프킨 러시아 국방부 제1차관은 2011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10년간 군 현대화에 19조 루블(6천53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2015년까지 전체 무기의 45%를, 2020년까지 70%를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임.
- 2010년 10월 대통령령으로 군 조직을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위해 4개 지역사령부에서 4개 전략사령부로 전환. 하바로프스크에 본부를 둔 동부 전략사령부는 극동 군관구, 시베리아 군관부 일부, 태평양 함대를 휘하에 둬.

○ 남쿠릴 열도 실효적 지배 강화와 극동 군사력 강화(최태강, 2011, 209-222)

- 2010년 다표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일본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11월 1일 러·일간 분쟁도서인 남쿠릴 열도를 방문 하였으며 이후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계속 추진함.
- 러시아는 이미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계획 2007-2015’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6억 달러 이상을 투입,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에 나섰다.
- 러시아는 2010년 6월 말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동방 2010’ 훈련을 대규모로 거행하면서 남쿠릴 4도 중 하나인 에토로후를 훈련장으로 사용함. 또한 러시아 하원은 7월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 2일을 대일 전승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문 이후에도 푸틴 총리는 12월 6일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하여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를 포함한 공항 정비를 추진하는 등 쿠릴열도와 극동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빅토르 바사르진 지역발전장관,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 등 러시아 지도부는 줄을 이어 쿠릴열도를 방문하여 쿠릴열도 발전추진을 약속함.
- 쿠릴열도를 포함한 극동지역 군사력도 최근 강화되고 있음.
 - 러시아 참모총장 니콜라이 마카로프는 2011년 2월 소련 붕괴 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은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평화사명'이라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하여
그간에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함**

후 러시아가 유럽에서 구입한 최대 규모 함정인 미스트랄급 헬기 상륙함 4척 중 적어도 1척이 2013년 이후 태평양함대에 배치되어 남쿠릴 열도 등의 방위 임무에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함.

- 러시아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S-400 대공미사일부대도 극동에 배치할 예정임.
- 러시아 군은 2010년 10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신형 잠수함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SLBM) ‘불라바(Bulava, 철퇴)’를 장착한 보레이급 잠수함 ‘유리 돌고루키’를 캄차카반도 해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임. 사거리가 1만km에 이르러 사실상 전 세계가 공격권인 불라바는 6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싣고 마하 5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발사 뒤에도 고도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러시아의 차세대 주력 핵미사일임.
-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2011년 2월 4일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를 방문하고 두 섬의 군 장비를 교체할 것임을 밝혔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1년 2월 9일과 3월 18일 남쿠릴 섬이 러시아의 전략적 지역이고 충분한 무기와 적절한 병력 및 군 시설 현대화를 통해 이 지역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푸틴 총리는 2010년 7월 20일 러시아가 247억 루블(9,750억원)을 투자, 아무르주 대륙간 탄도탄 기지가 있는 우글레고르스크에 동방우주기지를 건설하여 유인우주선 발사대 2대 등 7대의 발사대를 2018년 완공 목표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기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이 기지가 건설되면 첨단기업들이 유치되고 기지 자체 고용인원만 2만-2만5,000명에 이를 것이며 주변 인프라까지 합치면 4,000억 루블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경향신문, 2010.7.22).

○ 군사훈련

- 2003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상하이협력기구(SCO)회원국들은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평화사명’(Peace Mission) 반테러훈련을 거행함.
- 2005년 8월 러·중 양국은 사상 처음으로 최신예 전투기·전략전폭기와 첨단 구축함을 동원한 대대적인 양자 연합 군사훈련으로 ‘평화 사명 2005’를 실시하고 낙하 및 상륙작전, 점령지 방어 및 미사일 발사 등 실전 공격훈련을 벌였음.¹³⁾
-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첼랴빈스크에서의 ‘평화사명 2007’에 이어 2008년 10월에는 미국 항공모함 워싱턴호가 동아시아에 ‘항모 의

- 교'에 나서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결정과 때를 같이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국의 현대급 미사일 구축함 '타이저우(泰州)호'를 비롯한 동해함대가 해군 600여 명을 태우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러시아 태평양함대와 합동 군사훈련을 가졌음.
- 2009년 러시아는 4월 23일 중국 해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산둥성 칭다오에서 한국을 비롯한 15개국 군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열병식에 군함을 파견하였고, 7월 22일부터 8월까지 양국 영토를 오가며 반테러 합동군사훈련 '평화사명 2009'를 실시하였음.¹⁴⁾
 - SCO합동훈련의 주목적은 반테러훈련인데 2005년은 양안사태나 한반도 유사사태 대비 성격이 강했고, 2009년 훈련도 북한 위협 요인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음(엄구호, 65-66). 2011년 '평화사명 2011' 역시 동해북부에서 거행될 예정이므로 주목됨.
 - 러시아는 2010년 6월 29일에서 7월 8일까지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 군·관이 참가한 대규모 기동훈련 '동방 2010' (East 2010)을 실시함(한국국방연구원, 223-225).
 -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위협을 상정한 전력 및 병력의 신속 전개 훈련을 실시하여 동북아에 대한 위협 억지력 과시.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훈련 참관으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함정에 승선하여 해상훈련을 참관하여 해군력의 중요성 강조.
 -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극동지역에서 가상적으로부터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언급했지만 한국 및 일본 언론은 북한 급변사태 대응 훈련으로 보도하였음.¹⁵⁾
 - 병력 수송과 장비 배치 방식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군사전문가들이 지적. 훈련에 필요한 중장비 전부가 사전에 중국 인근 무기창고에 보관되었고 우랄주둔군의 극동 도달시간을 48시간에서 6시간까지 대폭 단축하였음. 또한 중국 군사 참관단은 러시아 육군 기동훈련만 참관하였고, 해상훈련 등 가장 중요한 훈련 일정에서는 배제됨.
 - 단시간 내에 대량 병력 동원 수송 능력을 보여주어 북한, 일본,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가능한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여겨짐.
 - 러시아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사전 대비하려는 의도인 듯 2011년 9월 미사일 순양함인 바르약호를 투입해 일본, 미국과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러시아가 미국과 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실

**북·러 관계증진을 통해
러시아의 대 한반도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향후 북·러 또는
남·북·러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위상이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구해야**

시하는 것은 2006년 마셜제도에서의 훈련 이래 5년만이며, 일본 해상 자위대와의 훈련도 2008년 이후 3년만임.

- 정상회담을 통한 북·러관계 정상화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여 2011년 8월 24일 울란우데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그간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하였음.
 - 구소련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후원국으로서 군사·외교·경제 지원을 제공했었는데, 소련 붕괴 후 후계자인 러시아는 동맹을 깨고 오히려 남한과 더 가까워지려 했음.
 -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다음해 김정일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2002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핵문제의 발발과 양국 간 부채문제 미해결, 러시아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양국 관계는 또다시 소원해졌음.
 - 메드베데프가 북한의 주장인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자, 김정일은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과 남·북·러 가스관 3자위원회 발족에 동의하였고, 비록 ‘6자회담 전’이 아니라 ‘회담 과정’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핵 물질 생산과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는 선물을 제공해 러시아의 체면을 세워주었음. 북한과 러시아는 관계를 정상화하고 전략적·경제적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대외협상력을 강화하였음.
 - 그 결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복원되었고, 향후 가스·전력·철도 등 인프라부문에서 북·러 또는 남·북·러 경협이 강화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임.

4.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 중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및 목재의 생산·가공, 건축자재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일본은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가스수송망·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노선 및 우주기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수산업 등으로 투자 다각화를 꾀하고 있음. 우리는 북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극동지역과 협력해야 하는 형

편인데 극동지역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1%에 미치지 못할 정도임(이재영, 서울신문, 2010.12.27). 중국과 일본의 정책을 교훈 삼아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경험 및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진해야 할 것임.

- 나진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남·북한 종단철도 연결 사업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러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다양한 형태로 나진항 물류 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기업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과 합작하여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함.
-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과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은 한국의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켜주고 한반도 물류기지화 및 운송비 절감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동시베리아 가스를 선점한 중국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무조건적인 독점 열정을 감안하여 석유 290억t, 가스 23조m³, 석탄 3조t이 매장되어 있는 러시아 극동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필요. 특히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81.8%가 중동산이므로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ESPO 주변 유망한 유전·가스전을 한·러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망됨.
- 러시아의 2012년 9월 8-9일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추가 도발을 삼가고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도록 설득할 것을 유도함.
- 남·북·중, 남·북·러, 한·중·러, 남·북·중·러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경협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진흥함.
- SCO 업저버회원 가입을 검토
- 한미동맹을 한국의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삼아 우호관계를 꾸준히 강화하여 가되 한·미관계 일변도로 치우치지 않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강대국으로서 대우함으로써 중국

과 러시아와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실용외교의 지혜를 발휘해야 함.

- 북한의 핵개발 및 작년 두 번의 무력도발, 한·일, 중·일, 러·일의 영토갈등,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등으로 동북아에서 대립·갈등적 안보질서가 형성되고 있음. 러시아는 구소련 고르바초프시대부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구해왔음. 또한 최근 몇 년간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들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이해관계와 인식이 호전되었음. 특히 중국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고 미국 역시 6자회담이 잘 되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발전시키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가장 희구하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와 러시아의 후원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제창·추진하는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홍현익

現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겸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프랑스 Paris I대학(Panthéon-Sorbonne)에서 “고르바초프의 對美 냉전 종식 정책 결정 과정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주요 경력으로는 청와대 NSC 정책자문위원, 미 Duke대 객원연구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동북아시아위원회 외교안보전문위원, 민주평통 국제위원회 상임위원 겸 간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을 역임했음. 주요 논문으로는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동맹”, “한국의 대북전략과 한·러 협력 방안: 남북 상생·공영 달성 방안을 중심으로”,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외 다수가 있음.

주석

- 1) 이 장의 상당부분은 홍현익(2010), pp.1-4를 수정·보완한 것임.
- 2) 러시아를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2011년 6월 16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간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를 선언하면서 양국무역액을 2015년까지 1,000억달러,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단계적으로 증진하자고 합의했으며 ‘중국 동북지구와 러시아 원동 및 동서시베리아지구의 협력계획요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동아일보, 2011년 6월 18일.
- 3) 2007년 2월 러시아 정부는 동부문제에 대한 최고로 강력한 권위를 가진 조정기구로 총리가 지휘하는 ‘극동, 부랴티아공화국, 이르쿠츠크와 치타주 사회·경제발전문제 국가위원회’를 설립했고, 2008년 5월에는 ‘2025년까지 극동지역 및 부랴티아공화국, 자바이칼 변경지역 및 이르쿠츠크주의 사회·경제발전전략’을 편성함. 주시엔핑, “러시아 동부발전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배정호·주시엔핑(편),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한반도』(통일연구원, 2010년 12월), pp.187-193.
- 4) 양국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개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황금평·나선 특구 개발 협의를 위한 추진체계를 확실히 갖추었음.
- 5) 알렉산더 보론초프, “러시아-한반도 철도연결 프로젝트: 현 상황과 전망,” 배정호 Alexander N. Fedorovskiy,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한반도』(통일연구원, 2010년 12월), pp.149-151.
- 6) 착공식에는 북한의 전길수 철도상, 궁석용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과 러시아의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 차관, 발레리 수히닌 주북 대사, 블라디미르 야

- 쿠닌 사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대표단, 세르게이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 등이 참석하여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음. 연합뉴스, 2008년 10월 4일.
- 7)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철도 개선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400만의 수송 능력과 연간 10만 개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 연합뉴스, 2008년 10월 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정봉민 선임연구위원은 나진항과 중국의 동북3성간 연계도로,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정비되면 나진항의 컨테이너 화물 수요는 향후 2020년까지 계속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 이유를 북한의 나선 자유경제무역지대가 국제 화물중계, 수출가공, 관광금융 중심거점으로 기능하고, 나진항은 중국 동북3성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동시에 러시아 극동지역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 또한 그는 중국의 동북3성은 동해나 태평양으로 출구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나진항이 “동북3성 화물의 관문”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나진과 동북3성을 잇는 도로망 정비, 나진-하산간 철도정비, 한·중·러 합작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8년 10월 28일.
 - 8) 정법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외면할 수 없는 남북경협사업이다.” 『민족화해』, 통권 38호 (2009.05-06), p.46 참조.
 - 9) 이외에도 양국은 2010년 8월 중국 텐진에 50억달러를 공동 출자해 정유시설을 세우기로 하고, 향후 25년간 러시아 석탄을 중국에 공급하는 대신 중국은 60억달러 차관을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음. 머니투데이, 2010년 9월 27일.
 - 10) 한국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연 150만씩 2028년까지 도입하게 됨. 사할린산 가스의 도입은 가까운 거리로 인해 운반을 위한 운항기일이 3일에 불과해, 중동(15일), 동남아(7일)에 비해 크게 짧을 뿐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에 편중된 도입선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음. 연합뉴스, 2009년 2월 18일.
 - 11) 연합뉴스, 2009년 2월 18일 & 19일.
 - 12)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최소 750만의 천연가스를 30년간 도입기로 하고, 이에 앞서 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러시아 국경에서 북한을 통과해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가스배관 건설에 대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음.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0년께 최종계약이 체결되고, 이르면 2015년께 우리나라에서 한·러 간 천연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됨. 연간 750만의 천연가스는 국내 총수요의 20%에 달하는 물량으로, 1천250만가가가 1년간 소비하는 규모. 연합뉴스, 2008년 9월 29일. 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북한을 경유한 PNG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자 PNG 방식을 포함해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 3개 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여 2010년 5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끝내 경제성 측면에서는 PNG 방식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북한 악재 등 정치적 측면 등을 고려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임. 현재로서는 시베리아산 가스를 가스관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시켜 LNG나 CNG 형태로 가공, 배로 가스공사 삼척LNG 생산기지로 들여오는 방안이 유력함. 또한 물량도 국내연간 소비량(2009년 기준 2,400만)의 8.3%인 연 200t정도로 예측됨. 파이낸셜뉴스, 2010.9.10.
 - 13) 훈련지가 대만과 유사한 지형을 가진 산동반도와 칭타오 인근 연안도서였다라는 점은 대만 점령 후 미·일연합군의 공격을 지지하거나, 북한의 유사사태시 미군 진입을 억지하기 위하여 양국 무기와 부대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모색한 것임을 보여주었음.
 - 14) 이 합동훈련은 2009년 양국간 실시되는 25차례의 합동훈련의 일환으로서 양국에서 각각 1천300명의 육·공군 병력이 참가하고 1단계는 러시아 극동 하바로프스크에서 실시되었으며 2-3단계 훈련은 중국 동북 3성 중 지린성에서 이뤄졌음. 연

합뉴스, 2009년 6월 6일 & 7월 22일.

- 15) 러시아는 7월 3일과 4일 연해주 하산 일대에서 2003년 8월에 이어 대규모 북한 난민 유입에 대비한 훈련을 가졌음. 주로 수용시설 설치와 식량 의료지원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평화 사명 2005’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미군이 북·중·러 국경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에 공동 진입하는 훈련이라고 볼 때, 두 훈련을 종합해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소극적인 난민 수용과 적극적인 북한 진입 모두에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함. 동아일보, 2010.7.7.

참고문헌

- 남문희, “‘경협 훈풍’ 부는 북·중 국경의 봄,” 『시사인』, 2011.3.12, pp.48-51.
- _____, “나진항 개발 뛰어든 ‘매리’의 도전,” 『시사인』, 2011.4.2, pp.18-24.
- 보론초프, 알렉산더, “러시아-한반도 철도연결 프로젝트: 현 상황과 전망,” 배정호 Alexander N. Fedorovskiy,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한반도』(통일연구원, 2010년 12월), pp.142-163.
- 부르두크스카야, 마리아, “러시아의 특별한 지방-극동,” 『Russia · CIS Focus』, 제 108호, 2011년 4월 25일.
-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한반도,” 세종연구소 강연 자료 (2010년 9월 17일).
- 성원용,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남·북·러 삼각경제협력,” 고재남·엄구호,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한국학술정보, 2009), pp.429-486.
- _____,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JPI정책포럼』, No. 2010-36 (2010년 12월), 15 p
- 소콜로프 D.A., “한·러 에너지분야 협력의 우선 방향,” 『Russia · CIS Focus』, 제 112호, 2011년 5월 23일.
- 엄구호, “SCO에서의 러·중 협력: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 제7권 제1호 (2011. 6), pp.37-71.
- 위샤오, “창지투 개발 계획과 국제협력의 구상 및 현황,” 배정호·주시엔핑 (편),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한반도』 (통일연구원, 2010년 12월), pp.66-91.
- 이남주, “중국의 굴기와 동북아 딜레마,” 『한반도 포커스』, 제10호 (2010년 11·12월호), pp.5-8.
- 이성규, “ESPO 원유 등장으로 아시아 원유공동시장 가시화,” 『Russia · CIS Focus』, 제68호, 2010년 7월 19일.
- 조영남,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중소연구』, 34-2 (2010년 여름), pp.41-68.
- 주시엔핑, “러시아 동부발전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배정호·주시엔핑(편),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한반도』(통일연구원, 2010년 12월), pp.186-207.
- 최태강, “러시아: 러-중 군사협력 관계,” 『주변국 통합 정세세미나』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2010년 12월 2일), p.러시아 1-16.
- _____,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분쟁심 구나시리방문 이후 러-일관계의 변화,” 『슬라브학보』, 제26권 2호(2011), pp.209-233.
- 한국국방연구원,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KIDA Press, 2011년 4월 15일), 354 p.
- 한종만, “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 한·러 협력관계의 회고와 전망,” 『시베리아 극동연구』, 제6호(2010 겨울), pp.147-191.

홍현익,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반응,” 『주변국 통합 정세세미나』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2010년 12월 2일), p. 미국 1-12.

_____, “미·중·러 3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세종정책연구』 2011-1 (세종연구소, 2011년 1월 25일), 69p.

JPI 정책포럼 현황

-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2011년 7월)
- 양창석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2011년 6월)
- 박동훈 『경제위기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 현황과 전망』 (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종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흥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칭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